

난개발 논란...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무산되나

광주시·사업자 연장 협상도 결렬
 자문위원 다수 협상 종료 의견
 광주시 검토후 연장 여부 결정
 완전 결렬엔 책임공방·소송 가능성

난개발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4조원 규모의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차례 연장했던 협상기간 만료를 앞두고 광주시와 사업자가 다시 만났지만, 개발 방식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조만간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협상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 결렬시엔 법적 소송 그리고 협상 연장시엔 업체 바꾸기와 연이은 협상 무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논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협상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외부 4명, 내부 7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대부분이 협상 종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측이 새롭게 제시한 사업계획으로는 공모 지침상 사업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지난 3월 3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두 달간 협상 뒤 30일 더 협상 기간을 연장했다. 광주시는 추가 협상기한 만료에 따라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6일 간부회의에서 ▲광주 발전과 시민 이익 부합 ▲한류문화콘

텐츠 거점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확실한 참여 보증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 세대수 건립 등 이른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측은 이날 회의에서 2개 엔터테인먼트사와의 콘텐츠 제공 협약 등을 추가 제시했지만, 이 시장이 내놓은 '3대 원칙'을 충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협상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 협상 연장 명분이 빈약한데다, 연장시 3대 원칙을 충족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립 이익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성공의 기본 조건이지만, '3대 원칙' 중 하나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 세대수 건립' 조건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협상결렬시 컨소시엄측의 반발이 예상되며, 책임공방과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등을 놓고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각종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된 평동 준공업지역 일대를 전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콘셉트로 1만5000여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상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는 부지 조성비(1조46억원)와 전략산업 시설 건설비(8052억원)만 1조8098억원으로 아파트 등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상 아파트(5000여 세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며 한류 사업 구상 실행 능력 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개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 '빅3' 선거인단 모집 앞두고 조직 풀가동

후보별 호남서 30만~50만 목표
 당원·일반 선거인 최대 300만명
 대선티켓 100만표 확보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권 주자 진영에서 예비경선을 넘어 '본선'을 겨냥한 전국 조직망 확충을 통해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전진 기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의 예비경선이 끝난 이후,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각 대권 후보 진영에서는 조직 확충과 함께 선거인단 모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빅 3' 진영에서는 호남에서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지난달 12일 창립대회를 연 이후 지역별 출범식을 거듭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달 15일 열리는 서울 출범식은 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과 공동으로 개최, 세 과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전국 지지모임인 '신복지 포럼'은 현재까지 10곳의 광역·시·도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오는 12일 서울 출범식 등 이달 하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립 행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달 3일부터 '균형 사다리 포럼'을 지역별로 발족하며 조직망을 정비하고 있다. 기존의 우정포럼, 우정특공대, 국민시

대 등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지지 모임을 큰 틀 안에 모아 체계화하는 것이다. 지역 기반인 전북의 경우 6~7개 권역별로 쪼개서 발족하는 등 '거미줄 조직망'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당원이나 일반 선거인 모두가 동등한 1표를 행사한다. 때문에 70~80만 명의 관리당원에 더해 각 캠프가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가 승패의 중요 변수가 된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 선거인단은 총 214만 명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유효투표 수 164만2640표 가운데 총 93만6419표를 얻어 57.0%의 득표율로 후보로 선출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선거인단이 최소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100만 표 정도를 대선 티켓을 거머쥘 매직 넘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빅 3' 진영에서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호남에서도 많게는 30만~5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을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광주에서 20만 명, 전남에서 15만 명, 전북에서 15만 명 등 50만 명을 모으는 입장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광주 15만, 전남 20만, 전북 10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는 광주 10만, 전남 10만, 전북 1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 지역 인구 등 현실을 감안한다면 각 후보 진영에서 20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유명 선거인단 등 각종 불·탈법 모집이 성행하면서 상당한 잡음도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대권주자들 '이준석 돌풍'에 연일 견제구

이재명 "포퓰리즘으로 흐를까 우려"
 이낙연, 대선연령제한 완화 주장
 정세균 "당 통솔 생각보다 어려워"

갑수룩 거세지는 '이준석 돌풍'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밤 공개된 유튜브 브 '김어준의 다스비다' 인터뷰에서 이준석 현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당을 통솔한다는 것은 총리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 이준석 현상"이라면서도 "별별 사람이다 모인 정당에서 지도부가 합의를 끌어내고 선거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제"라고 했다. 배경에 깔린 변화 요구 민심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직을 맡기에는 경륜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는 "우리 당의 대표 평균 임기가 4개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 가장 당 대표를 오래 한 사람이 접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돌풍을 두고 "국민들의 열망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반영되면 좋겠는데 자칫 소위 극우 포퓰리즘의 경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열망을 관리하는 정치적인 입장이 적대와 균열, 대립을 에너지 삼아 이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게 곧 극우 포퓰리즘"이라며 "그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크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여성 할당제 반대 등이 후보의 정치적 입장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 "이준석 후보가 선전했다면 좋겠다"며 "이를 계기로 야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덕담한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의 선전을 넘어 차기 대권주자 순위에도 언급되며 정치 지형까지 변

화시킬 조짐을 보이자 견제 심리도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이준석 현상에 대한 직접적 논평은 피하면서 조직·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뀌어야 한다"며 청년 정치 이슈를 자신의 개인론과 연계시켰다. 이 전 대표는 5일에는 지지모임인 '신복지 울산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울산의료원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비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유세 해상 풍력발전과 그린 수소 융복합단지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하겠더니 검찰권력을 지키는 데 몰두하다가 정치로 직행했다"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소상공인의 꿈을 키웁니다
 지역경제의 희망을 만듭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력
 판매 목표액 1,400억원 / 국도비 108억원 확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업체당 최대 16만원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점포환경(노후 기판, 내부 집기 교체 등)

